

이 자료는 2010년 12월 27일(월)
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0년 추진성과 및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-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-

2010. 12. 24

기 획 재 정 부
문화체육관광부
보 건 복 지 부
국 토 해 양 부
통 계 청
녹색성장위원회

교육과학기술부
농림수산식품부
환 경 부
중 소 기 업 청
산 림 청
공정거래위원회

외 교 통 상 부
지 식 경 제 부
고 용 노 동 부
관 세 청
금 융 위 원 회

◇ 본 보고서는 '09.12월 발표된 3년 시계의 「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2010~2012」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, 최근 대내·외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2011년 중점 추진할 대외경제정책 과제를 추가·보완하기 위해 수차례의 전문가·관계부처 회의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음

순서

I. 추진 배경	1
II. 주요 추진 성과	3
III.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여건	5
IV. 2011년 대외경제정책 중점 추진과제	7
1. 기본 방향	7
2. 중점 추진과제	8
【 우리 경제 “성장 프론티어” 확충 】	
(1) FTA 네트워크 내실화 및 역내 경제통합 진전	8
(2) 다자간 무역·금융 협력 강화	11
(3) 해외 투자 확대 및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	13
(4)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및 무역금융 지원 강화 ...	16
【 글로벌 / 역내 파트너십 강화 】	
(5) 신흥·개도국과 맞춤형 복합 경제협력 확대	18
(6) 전략적 자원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	22
(7) 기후변화 및 녹색분야 경제협력 강화	24
【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】	
(8) G20 등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공고화	26
(9)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개발협력 강화	27
【 대외 부문 인프라 구축 】	
(10) 대외활동 기관 역량 및 지역연구 강화	30
V. 향후 추진계획	31

I. 추진 배경

- ①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부상 등 글로벌 지배구조가 변화하고
보호주의·자원확보 등 국가간 갈등요인이 부각되는 가운데,
 - 대내·외 경제정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
일관성 있는 대외경제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
 - '09.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3년 시계의 「대외경제정책
추진전략 2010~2012」을 수립

* 추진방향 : ①우리경제 '성장 프론티어' 확충, ②글로벌/역내 파트너십 강화
③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④대외부문 인프라 확충
- ② 3개년 전략 추진 첫해인 2010년 우리나라는 G20 서울 정상
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하고,
선진국/신흥·개도국과의 경제협력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
 - 그러나,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및
보호주의 확산이 우려되고, 국내적으로도 한·미, 한·EU
FTA 비준 관련 갈등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
- ③ 2011년 대외경제정책은 3개년 전략의 큰 틀 내에서 2010년
추진성과 및 내년도 여건 변화에 따라 중점 추진 과제
수정·보완, 신규 과제 발굴을 통해 효과성/적실성을 제고
 - ① 이를 위해, 거대경제권 등과의 FTA 비준·발효 등 통상
네트워크의 내실화 및 역내 경제통합 진전 등을 통해
제도적 협력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고,
 - ② 우리기업이 신흥국 등 새로운 지역 및 원전·고속철 등
새로운 분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외
부문에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,
 - ③ 개발협력 확대 등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를 이어
나가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

① 추진체계

- 3년* 시계를 가지고 마련하되,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 및 그간 정책 평가를 감안하여 매년 연동·보완(rolling-plan)

* 대외경제정책의 연속성 등을 감안할 때 1년 단위는 지나치게 단기이며, 급변하는 대외여건을 고려할 때 5년 단위는 지나치게 장기

② 비전: 『성숙한 세계국가』 (국정지표)**① 글로벌 경제와 통합을 지향하는 개방된 한국**

-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국제사회와의 일체감 제고

②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더 큰 한국

- 우리경제 규모와 역할에 상응하는 국제사회 기여

③ 개방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한국

- 개방의 과실이 중산·서민층 및 중소기업 모두와 공유되는 따뜻한 대외경제정책

③ 4대 추진방향**① 우리경제 “성장 프론티어” 확충****② 글로벌 / 역내 파트너십 강화****③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****④ 대외부문 인프라 확충**

Ⅱ. 주요 추진 성과

- ◇ 2010년 우리나라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하고, FTA 및 개발협력 등을 통해 선진국/신흥·개도국과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

① 우리 경제의 성장 프론티어 확충

- ① 경제 선진화, 新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거대·선진경제권 및 신흥국·자원부국과 FTA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

* i) 한·EU FTA 정식서명('10.6), 한·미 FTA 추가협의를 등 既타결 FTA 진전 여건 마련 ii) 한·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(5.28), 한·인도 FTA 발효(1.1), 한·페루 FTA 가서명(11.15) 등 신흥국과 FTA 추진 확대

- ② 중소기업에 대한 R&D, 수출금융 지원, 국제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대외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기반 조성

* 수출원자재 구입비 신용대출, 해외조달정보 제공, UAE·이스라엘 등과 중소기업 투자 공동펀드 조성 및 기술교류 등 추진 협의

- ③ KRX(한국거래소) 국제화*를 통해 역내 경쟁력을 확보하고, 증권업 등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

* 한-라오스 합작 증권거래소 출범('10.10월), 캄보디아와 '11.7월 개장 추진

- ④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지원 방안 마련 등 우리기업의 적극적 해외진출을 지원

* '10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

- 수주액(억불) : ('06)165 → ('07)398 → ('08)476 → ('09)491 → ('10p)700

② 글로벌 / 역내 파트너십 강화

- ① 신흥경제권과 지역별 경제협력 추진방안*을 마련하고 협력채널을 강화**하는 등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

- * 중남미('09.11)에 이어 중동('10.3), 아프리카('10.5) 등 신흥경제권별로 포괄적이고 차별화된 경험방안을 마련
- ** 신흥경제권과 경험기반 구축을 위해 협력채널을 신설(브라질)하고, 기존 협의체를 내실화(러시아, 아프리카, UAE 등)

② 아시아 역내 국가간 금융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역내 경제통합 진전* 기반을 마련

- * CMIM 발효, 역내경제감시기구(AMRO) 설립 합의, 신용보증투자기구(CGIF) 출범 등

③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설립('10.6) 및 유엔지속가능개발센터 유치(인천), 동아시아기후포럼 개최('10.6) 등 녹색성장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

③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

①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* 등을 통해 국제사회 리더십을 제고하고 국격을 향상

- * G-20 의장국으로서 “선진국-개도국”간 架橋 역할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
-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‘서울 개발 컨센션스’ 및 ‘다년간 행동계획’ 채택을 주도하고, ‘11년 HLF-4 회의를 유치
- * ‘아시아 개발협력회의’(11월)를 최초로 개최하여 남-남 협력 기반 구축

②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」을 수립하고 ODA 규모* 및 개발경험 공유(KSP)를 확대

- * ODA/GNI 비율(%) : ('08) 0.09 → ('09) 0.1 → ('10) 0.13(전망)

③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(KSP)을 통해 17개국·66개 과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제공하여 개도국 정책역량 제고(Capacity building) 및 우호적 경제협력 기반 구축에 기여

- * 개도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KSP 모듈화 작업 추진('10년 20개 사례)

Ⅲ.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여건

◇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, '11년 성장률은 '10년보다 둔화될 전망*

- * 세계 경제성장률(% , IMF) : ('09) $\Delta 0.6 \rightarrow$ ('10) 4.8 $\rightarrow$ ('11) 4.2
- 세계 교역(% , IMF) : ('09) $\Delta 11.0 \rightarrow$ ('10) 11.3 $\rightarrow$ ('11) 7.0

- 미국, EU 등 선진국은 높은 실업률 및 재정건전화 노력 등으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며, 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
- BRICs 등 신흥국은 물가안정 노력, 선진국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겠으나,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 지속 전망

① 최근 각국의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보호무역주의, 자원 확보 경쟁 등 국가간 갈등요인 부각

- ① 국내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 및 국경간 자본이동 제한조치 등 각국의 정책이 타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환율갈등 및 보호주의 움직임이 확산될 우려
- ②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, 기후변화, 신흥국의 성장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,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
- * 곡물수출 금지조치 및 희유금속을 둘러싼 갈등 등 자원 무기화 움직임도 확대

② 美·日·EU 등 선진국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, 세계경제에서 BRICs 등 신흥국 및 아시아 경제의 중요성과 위상*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글로벌 지배구조가 변화

- * 이러한 신흥국의 위상 변화를 반영하여 신흥국의 지분 비율을 확대하는 IMF 쿼터 개혁에 합의

① '10년 중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2위로 상승*하였고, 아시아·중남미·아프리카 등 신흥경제권이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

- * 최근 중국은 위안화 유연성 확대,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실시의 전세계 확대(6.22) 조치 등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 노력을 강화

② 빠른 경제성장으로 세계경제에서 **아시아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, FTA 등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***도 진전

* 中-대만 ECFA 체결, 韓-中 FTA 산관학 공동연구 마무리, 韓-中-日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/ 역내경제감시기구(AMRO) 및 신용보증투자기구(CGIF), 역내증권결제기구(RSI) 설립 추진 등

- 중국의 적극적 FTA(대만, 아세안 등) 정책 등 감안시,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점차 취약해 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
- 또한, 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제품 공급자로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중요성도 보다 증가

③ 국내적으로는 주요 대외정책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도출 등 대내 갈등조정을 위한 체계적 적시대응이 요구되고, G20 정상회의 후속조치 등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

① 한·미/한·EU FTA 비준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

② 기업형 슈퍼마켓(SSM) 규제 등 국내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한 국내 정책과 소비자후생증진·대외개방정책 추진 방향과의 조화 필요성이 부각

③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선진국 위주 개발논의에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*되는 계기를 마련한 만큼 개발 이슈에 대한 이론적/실천적 기반**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필요

* 개도국 인프라 확충, 개발경험 공유 확대 등 개도국의 자생적 발전 역량 증진에 중점을 두는 개발협력 논의가 보다 확대될 전망

** G20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, G20 정상회의 및 '제4회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(HLF4)' 등을 통해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G20 개발의제 국제화 추진

◇ 선진국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지속적인 신흥국의 부상, 세계경제질서 변화, 통상 현안 등 대외경제정책 분야에 대한 국내 관심 증가 등은 우리에게 위기/기회를 동시에 제공

Ⅲ. 2011년 대외경제정책 중점 추진 과제

기본방향

- ◇ 3개년 전략의 큰 틀 내에서 그간의 추진성과 및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수정·보완
 - 세계경제 회복 지연 및 통상현안 등에 대한 국내 갈등 발생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,
 - 서울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 및 높아진 국가 위상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적극 활용
- ◇ 이를 위해 우선, 보호무역주의 등을 극복하고 세계 경제에서 우리의 비교우위 확보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경제 자체의 성장 프론티어를 확충
 - ① 미국·EU 등 거대경제권 등과의 FTA 비준·발효 등 통상 네트워크의 내실화 및 역내 경제통합 진전 등을 통해 제도적 협력기반을 확충
 - ② 글로벌 지배구조 변화에 맞추어 아시아·중남미·아프리카 등 신흥 개도국과 교역·투자는 물론, 자원·식량·녹색 성장 등에 대한 맞춤형 복합 경제협력을 적극 확대하고,
 - 신흥시장/국제조달시장 등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,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무역금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
- ◇ 아울러, 대외원조 확대를 기반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원조정책 추진,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국제 사회 기여 및 우리나라의 국격/리더십을 제고

(1) FTA 네트워크 내실화 및 역내 경제통합 진전

① (美·EU와 FTA 비준·발효)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인 미국과의 FTA 비준과 EU와의 FTA 잠정발효('11.7.1)를 '11년중 마무리

* 대한상의는 한·미 FTA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연15.2조원으로 추산('07년)

① (기본방향) 비준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정부 차원의 실무추진단을 구성*하여 대국민·정치권 설득 추진

*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으로 각부처 1급(기조실장), 청와대 관계비서관, FTA 국내대책본부장(간사) 등이 참여

② (한·미 FTA) 내년초 추가협정문 정식서명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(1분기 예상)에 정부측 비준동의안 국회(외통위) 제출

- 美 정부와 의회 동향*에 따라 탄력적으로 국내절차 진행

* '11년 새롭게 구성되는 미 의회 동향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거나 美 정부는 내년초 FTA 관련 이행법률안 의회 제출 가능성 (미국 상·하원 비준동의 절차에는 최대 90일 소요)

③ (한·EU FTA) 既합의된대로 '11.7.1일 잠정발효 추진

- EU측 의회 동향을 보아가며 내년초 우리측 비준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

* EU측은 한·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 대한 EU 의회, 집행위, 이사회간 3자협정이 마무리됨에 따라(12.16일)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및 한·EU FTA 동의를 내년초까지 처리한다는 입장

② (FTA 네트워크 내실화) '중장기 FTA 추진전략'을 토대로 FTA를 통한 신흥시장 선점 및 자원확보, 경제 선진화 추진

① 협상이 진행 중인 신흥국(호주·터키·콜롬비아 등)과의 FTA는 잔여쟁점을 정리하여 '11년중 조속한 협상타결 추진

② ASEAN, 칠레 등 既발효 FTA는 양허수준 제고방안 모색

* 베트남, 말레이시아 등과 양자 FTA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등

③ 시장선점 및 자원협력을 위해 중남미, 아프리카, 중동, 중앙아시아 등 신흥국 중심으로 FTA 신규 추진국 지속 발굴

* MERCOSUR, 이스라엘, 몽골, 파나마, 코스타리카, 도미니카 등과 여건 조성 중

③ (역내경제통합 진전)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한·중, 한·일, 한·중·일 FTA 추진 등을 신중히 검토

① (한·중 FTA) 정부간 사전협의 추진경과, 심층연구* 결과, 국민여론 동향 등을 감안하여 협상개시여부·시기 판단

* (추진개요) '11년완료를 목표로 14개 정부부처, 20개 연구기관·협회 등이 참여하여 용역연구 진행중

* (연구내용·분야) 중·대만 ECFA 발효, 한·미/한·EU FTA 체결, 향후 산업 구조변화 등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일관된 분석의 틀을 적용하는 한편,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, 지재권, 투자, 비관세 장벽 분야 등 포함

② (한·일 FTA) 농산물 시장개방, 비관세장벽, 산업협력 등에 대한 일본측 입장변화 여부 등을 감안하여 협상재개여부 판단

③ (한·중·일 FTA) '12년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, 중국, 일본과의 FTA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방향 결정

- (TPP*)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('11년 실시) 결과 등을 감안하며 참여 여부 신중히 검토

* Trans-Pacific Partnership : 뉴질랜드, 칠레, 호주, 베트남, 미국, 말련 등 9개국간 무역자유화 협정

- (ASEAN+3, ASEAN+6) ASEAN 차원에서 구성된 실무 작업반* 연구에 참여하여 병행 검토

* 4개 분야 : ①원산지규정, ②관세분류체계, ③통관절차, ④경제협력

④ (FTA 효과 제고) FTA 활용도 제고 및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·교육 강화

① FTA 활용지원 범위 확대 및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, 既 마련된 「FTA 국내보완대책」 이행을 점검

- 중소기업에 대한 「원산지 관리시스템」 보급을 확대하고, 상이한 시스템간의 호환성 확보* 추진

* 관세청, 개별기업 시스템의 전자문서 표준화로 원산지확인 전산화 효과 증대

-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, 투자, 인력이동 등 FTA 전반에서 활용도를 제고하여 실질적 혜택 증진

-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설립, 「FTA 지역종합발전계획(가칭)」 수립·지원 등 중앙-지방 간 FTA 활용 네트워크 구축

* 각 광역시·도별로 지역 산업구조, 정책수요 등을 반영한 활용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활용지원사업을 연계 수행

- 「FTA 국내보완대책(07.11월)」 수립 이후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세부 이행과제 조정·보완 필요성 점검

② 국민들의 FTA에 관한 이해 제고 및 기업들의 활용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·홍보 강화*

* ‘기존무역정보+FTA 관세정보’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, 지역설명회, 컨설팅(FTA 닥터), 맞춤형 교육, FTA 전문가 양성 등

- 또한, 개방의 효과가 소비자후생 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통단계 점검 등 관련연구 실시

(2) 다자간 무역·금융 협력 강화

① (다자협력 확대) WTO, G20, APEC 등 다자채널을 통해 무역 자유화,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등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

① (DDA) '11년 작업계획*('10.11.29일 무역협상위원회 협의)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국제사회가 합의가능한 modality 도출에 기여

* Lamy WTO 사무총장이 발표한 ①'11년 1/4분기 의장텍스트 회람, ② 하계휴가전 모델리티 합의, ③ 하반기에 양허표 작성 등 기술작업 진행

② (GSTP) '10.12.15일 서명된 GSTP* 3라운드 의정서 및 관세 양허안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('11.1분기)

*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: 개도국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'88년 UNCTAD 산하에 설립된 특혜무역협정

- '11년 상반기 원산지규정 개정 검토 작업반을 구성하고 2년내 검토작업 완료 추진

③ (기타) OECD 조선협상*(12.16일 논의중단), 아태무역협정 등은 진행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점검

* 선가규율, 국가보조금, 개도국지위 등이 주요쟁점이었으며, 추후 계속 논의될 가능성 ('05.9월 중단이후 '10.4월 협상재개에 합의한 바 있음)

② (글로벌 금융협력 강화) IMF·WB 지분증가* 등 높아진 위상에 맞게 국제기구 출자·출연을 확대하고 아시아 역내 금융 협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

* 우리나라 지분율 증가(%) : (IMF)1.4 → 1.8, (WB)1.0 → 1.6

○ (국제기구 출자·출연)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 가입 검토 및 WB 등 주요 국제기구 출자·출연 확대

* 신탁기금 출연 예산(억원) : ('09년)251 → ('10년)504 → ('11년)682

- 아울러 청년일자리 창출, 국내전문가 국제기구 진출, 우리기업 대외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신탁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국제개발금융기구와 협의

○ (역내 금융협력) '11년 상반기 역내경제감시기구(AMRO)* 설립을 통해 아시아 금융안전망인 CMI다자화**체제 안착 지원

* ASEAN+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: ASEAN+3 역내 경제상황 분석 감시기구

** Chiang Mai Initiative다자화 : ASEAN+3 역내 상호자금지원체제 (총1,200억불 규모, 10.3월 발효)

○ (글로벌 금융규제개혁) G20 등을 통해 논의되는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적극적 역할 수행

- 大馬不死 문제해결을 위한 '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'(SIFI) 세부규제방안 논의과정에서 신흥국 입장 반영 추진

* 글로벌 SIFI 지정을 위한 국제 기준 마련, SIFI에 대한 보다 높은 손실 흡수방안 적용, 국가간 효율적인 정보공유 및 정리제도 개편 등

- G20 정상들이 합의한 「FSB 비회원국 참여 확대(FSB Outreach)」를 위한 지역협의그룹 설립 논의를 적극 주도

* FSB 지역협의그룹을 설립하여 신흥국 입장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틀을 마련하고, 「신흥국 국제 컨퍼런스」를 개최하여 신흥국 의견을 폭넓게 수렴

(3) 해외투자 확대 및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

- ① (해외투자 지원) 대외부분에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**해외투자* 내실화 및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 지원 강화**

* 해외직접투자 현황(억불) : ('09.1~9월) 134 →('10.1~9월) 248

- ① 중소기업 등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투자 실태조사 실시

* <'11년 실태조사 계획>

- 내용 : 투자실태 및 기업애로 등 파악 (KOTRA·연구기관 등 공동)
- 대상 : 중국 등 아시아지역 우선 실시 → 중남미 등 신흥지역으로 확대

- ②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사전 지원체계 및 사후관리 강화

- 신흥국 중심의 **현지지원거점 추가 및 정보제공 확대***

* 신흥국 비즈니스센터(KBC) : 현재 62개, '11년 12개 신설

* 해외진출정보시스템(OIS) : 해외KBC와 OIS간 연계강화 등 기능 개선

- FTA 체결 상대국 중심으로 **'통합무역정보 시스템'** 구축

* '11년에 FTA가 발효되는 EU를 우선 구축, 향후 미국·아세안·인도 등으로 확대

- 既진출기업의 분쟁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**국제카르텔 등 경쟁법, 노무 등과 관련한 교육·정보제공 등 사후관리 강화***

* (경쟁법) '11년 EU, 미국, 중국에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개최(3회)

(노무지원) KOTRA 노무지원 DESK를 '11년 중국(베이징, 상하이)·베트남·인도네시아·방글라데시로 확대, 순회설명회 개최 및 노무지원단 파견 등 추진

- ③ 신흥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**중소기업 등 우리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「신흥시장 진출 지원방안」 마련**

- 대기업 퇴직 해외진출 전문가와 중소기업 매칭, 채용인력 교육 지원 등

* '10년 시범사업(100명 채용목표) 추진성과 등을 보아 '11년 사업 확대 검토

- 현지시장 개척을 위한 **시장개척단 파견, 온라인 수출 확대**
-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*에 대응, 동반 성장, 청년고용 등의 이슈를 포함한 **한국형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개발·확산**

*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ISO 206000 제정 ('10.11월), G20 비즈니스 서밋의 주요의제로 CSR(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) 논의('10.11월)

- 아울러, 정부, 주요기업, NGO 등과 함께 T/F를 구성하여 개도국, 국제금융기구와 협력을 통한 우리 제품 및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방안을 강구

④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도 지속 지원

- 국가별 「서비스 해외진출 전략지도」 마련 및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*를 중심으로 「국가기술자격 상호인정 방안」 수립

* IT, 방송 등(방송통신 기능사, 의료전자 기능사 등)

- 의료분야의 경우 병원 등의 해외진출*을 확대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출 및 해외환자유치의 교두보 확보

* '병원해외진출협의회'에 KOTRA, KOICA 등도 참여하고, ODA 사업시 병원운영 시스템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원

⑤ 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 및 저작권 산업 해외진출 지원

- 글로벌 펀드* 조성, 해외영화 국내 로케이션 제작비 환급제 도입 등을 통해 콘텐츠 해외진출 자금 지원 확대

*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 ('11년 1,000억원, '12년까지 2,000억원 조성)

- HD드라마타운 조성,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, 3D 제작시설 설치 등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인프라 조성

* (HD드라마타운) '11~'14년/대전 (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) '10~'12년/고양

② (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)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 및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

- ① 해외 조달시장 진출의 종합적/체계적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「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협의회*」를 운영

* 총리실 국무차장(위원장), 관계부처 국장급, KOTRA·수은·KOICA 임원급

- ② UN, MDB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300개를 선정('11년 100개, '12년 200개)하여 全週期的 집중지원* 실시

* 입찰정보 제공, 벤더(Vendor) 등록 지원, 입찰 서류작성 및 컨설팅 지원 등

- 해외 정부조달 시장 참여 경험업체, 무역상사 등을 대상으로 「해외조달 전문 대행업체*」 50개 지정('11년중)

* 외국 조달기관과 우리 기업 사이의 매개체 역할 수행

- ③ 우리기업의 국제금융기구, UN 조달시장 등 진출확대를 위해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조달시장 설명회 개최('11년 상반기)

③ (전략적 FDI 유치) 신성장동력 확충, 고용창출, 기술이전 등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유치 추진

* '10년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지난 6년간 최고수준인 120억불 유치 전망

- ① 「제2차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3개년 계획*('11~'13)」 및 「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**」을 수립('11년 상반기)하고, 첨단융합기술, 녹색,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

* 외국인 경영·생활환경 개선, 외투기업 입지제도,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투자인프라 구축

**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10년간 구역별 전략적 포지셔닝 및 개발방향 정립

② 서비스분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T/F를 구성하여 핵심규제 완화를 추진하고,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·의료기관 유치 지원을 위한 종합 지원시스템 구축*

* 「'11년 투자유치 전략방안」 수립(1월) 및 투자유치·홍보협의회 구성·운영

- 특히, 교육분야는 소규모 외국 단과대학 유치 및 우수인재 유입 확대를 위해 **외국대학 설립기준을 완화***

* 시설물 확보에 대한 최소정원 기준을 1천명에서 4백명으로 완화

③ 아울러 외국기업의 일방적 국내진출을 넘어서, **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상호 호혜적 동반성장**을 위한 노력 강화

- 우리기술과 국내·외 자본의 결합을 통한 **제3국 공동진출**, 국내외기업간 **공동 R&D·마케팅 등 다중협력 사례 창출**

* 중동자본+한국기술을 토대로 제3국 진출(SOC, 자원개발)형 유치모델 창출, 국가간 중소기업 공동투자펀드 결성 등

(4)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및 무역금융 지원 강화

① (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지원) 플랜트, 인프라, 자원개발 등의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금융지원 강화방안 마련

① 정부 출자·출연을 확대*하고, 공기업 보유 주식의 수은 현물 출자 추진 등을 통한 금융지원 역량 강화로 수은·무역보험 공사를 명실상부한 **해외프로젝트 금융지원 전문기관**으로 육성

* '11년 예산안 : 수은 출자 1,000억원, 무역보험기금 출연 1,000억원

- 원전·플랜트, 자원개발 등 대규모 해외사업 분야에 대한 내년도 수은의 수출금융지원을 전년대비 50% 수준 확대

* 플랜트(조원) : ('10) 9.5→('11) 13.3, 자원개발(조원) : ('10) 2.2→('11) 3.6
녹색(조원) : ('10) 2.2→('11) 3.8 (Green Pioneer Program 등)

②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국내외 민간자본 참여 확대, 양허성 차관과 연계 및 국제기구와 협조융자 등 추진

* 민간금융의 환변동보험·통화스왑 활용 제고, 글로벌인프라펀드 참여 유도 등

③ '플랜트 지원 협의회'(국토부·지경부 장관 공동위원장)를 통해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, 정보수집·공유 체계를 개선

② (무역금융) 최근 금융규제 강화 추세 및 신흥·개도국 진출 증가 등에 대응하여 「무역금융 제도개선 방안」을 마련

○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회계기준(IFRS), 바젤Ⅲ 등 금융 규제 강화 추세 및 무역거래 패턴 변화*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역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**

* 무신용장 방식 거래, 우리 기업의 해외현지법인 거래 증가 등

** 아국기업 진출이 활발한 G20 국가(터키, 인도 등)에 전대은행을 적극 발굴

- 개도국과의 교역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개도국 관련 무역금융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, 대외부문 대·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수출 중견·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증진 기반 구축

(1) 신흥·개도국과 맞춤형·복합 경제협력 확대

- ① (맞춤형 경험전략 수립) 既수립 지역별 경험전략을 지속 점검·보완하고, 아시아 권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「동남아」, 「서남아」, 「중앙아시아」 지역과 경험전략을 신규 수립*

* 특히, 자원이 풍부하고 재건수요가 많은 국가 등과 재건경험 공유, 인프라진출 확대 등을 위한 맞춤형 경험전략 수립

- 에너지·자원협력, 상호 일자리 창출과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 경제협력의 모범사례*를 발굴·확산

* 예) 필리핀의 농·공 복합산업단지(MIC), 한·브라질 농업연구기관 상호진출 등

- ② (복합경협 추진) 교역·투자는 물론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·교육(직업훈련)·IT(통계시스템) 등 개발협력과 연계한 복합경협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장기 파트너십 구축

- ① (소비시장 진출) 신흥국이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*함에 따라 BRICs 및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 단계에 따른 차별적인 「제품수출 전략」 수립**

* 신흥국 중산층 전망(억명, OECD) : ('09) 18.5 → ('20) 32.5

** (예) BRICs : 가전, 승용차 등 고가 소비재
성장초기단계 개도국 : 저가 사무용 기기, 운송기계, 저가 최종 소비재 등

- ② (농업협력)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 등 농업협력을 확대* 하고, 개도국 식량위기 극복과 우리 농업자원 확보를 감안한 「상생적 농업협력 전략」 수립('11년 상반기)

* 해외농업기술센터(KOPIA) : ('10) 10개국 → ('11) 15(에티오피아 등 5개국)

*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(AFACI) : ('10) 14개 사업 → ('11) 20

* 한·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(KAFACI) 사업 본격화(11.3, 총회 개최)

- 수원국 수요가 높은 인적(전문가), 물적(인프라) 자원이 결합한 패키지형 방식의 **기획협력사업*** 및 **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등 국제협력 확대**

* 기획·국제기구 협력사업(억원) : ('09) 28→('10) 46→('11) 106 ('10대비 2.3배)

* 국제기구와 공동협력사업 확대 : ('10) 1개(FAO)→('11) 2개(게이츠 재단 신규)

- 아시아, 아프리카 등 개도국 대상으로 협력 대상국 확대

③ (환경협력) 환경산업 및 서비스업 해외진출을 위해 지역별·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

- 또한, 동아시아 중심의 「한-아세안 그린 파트너십포럼」을 중앙아시아, 중동, 아프리카, 중남미 등으로 확대
- 중국·베트남에 설치된 「해외 환경산업센터」를 중동, 중앙아시아 지역 등 유망지역으로 확대 설치

④ (인적자원개발협력) 고용허가제(15개국)와 연계한 직업훈련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*과 협력사업 내실화

* 아시아 국가대상 한-ILO협력사업 확대(10억→15억)

- 국내 글로벌 기업과 연계하여 외국의 현지법인·지사·협력업체 등으로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*

* 기존 진출 국가(미·일·EU) 뿐 아니라 해외투자가 활발한 국가(중국, 베트남 등)와 신흥 경제국으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별 특성에 맞는 기업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

- 아프리카 지역과 교육약정 체결 및 중등교육 수준의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* 운영('11년 100만불)

* UNESCO를 통해 '11~15년까지 남부 아프리카 국가(SADC) 중 5개국 선정

⑤ (과학기술협력) 아프리카권과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, 과기공동위 개최 및 인력교류를 통해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 강화('11년 10억원)

⑥ **(문화협력)** 개도국과 문화, 관광, 체육 분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 및 쌍방향 교류 지속 확대

- 아시아 국가와의 '예술커뮤니티' 구축 강화(23개국),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 대상 '해외작은도서관' 조성(15개소) 등 지원
- 국제기구*와 연계, 주요 개도국의 저작권, 관광, 전통문화 산업 분야 정책 지원, 공동 프로젝트 실시 등 협력 강화

* (저작권) 세계지적재산권기구 (관광) UNWTO (전통 문화산업) 유네스코

⑦ **(통계시스템)** 개도국 통계 컨설팅 지원 요청 증가에 따라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사업 확대

- '10년 「몽골 국가통계시스템역량강화(Monstat) 프로젝트」를 내년에는 카자흐스탄, 인도네시아에서도 신규 추진

- 또한, 대륙별 거점국가 선점*을 통한 기술원조 다변화 추진

* 정책수립, 발전성과 평가 목적의 통계기반 구축이 필요해진 CIS, 중동, 중남미, 아프리카 개도국을 1순위로 역량 투입

*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CT에 기반한 통계조사시스템(인터넷조사, 원격 탐사)과 자료서비스(지적콘텐츠 공유 및 대외컨설팅시장 발굴)를 중점 활용

③ **(제도적 협력기반 확충)** 자원부국·신흥국을 중심으로 투자보장협정,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확대*

* (투자보장) 93개국 既체결

→ '11년 4개국 체결 추진(가나·이라크·투르크메니스탄·적도기니)

(이중과세방지) 90개국 既체결

→ '11년 4개국 체결 추진(페루·파라과이·브루나이·탄자니아)

○ 기체결 협정도 실태조사를 통해 협정수준 제고* 추진

* 멕시코 등과는 투자자유화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개정 검토

④ (경협채널 확충) 장관급 고위정책협의의 채널을 권역별 주요국
으로 확대하고, 연관 경협채널 통합·조정을 통한 효율화 추진

① BRICs, UAE는 물론 아시아·중동·아프리카 등 지역별
주요국으로 장관급 양자간 경제협력 채널을 확대*

* 예 : 이집트, 남아공, 베트남, 호주, 쿠웨이트 등

- 양자간 협력은 물론 국제기구(ADB 등)와 협력을 강화*하고,
특히 아프리카, 동남아 등은 지역기구**와 연계개최 검토

* 한-브라질 재무장관회의를 미주개발은행(IDB)와 협력하여 개최

** 남아공(SACU와 연계), 베트남(GMS와 연계) 등

- 참석대상도 관계부처뿐 아니라 민간 기업·단체로 확대

* 기존 한·중 경제장관회의에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채널을 확대하고,
'한-호주 경제인 대화(Business Dialog, '10.10월)' 등 성공사례를 확산

② 경협채널의 효율적 운영 및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포괄적
협력의제 논의를 위해 연관 경협채널의 통합·조정 추진

- 특히,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KOAFEC 등 3개의 장관급
다자간 협력체를 하나로 통합·조정하는 방안 마련

* 장관급 다자간 협의체(3개) : KOAFEC(재정부), 한-아프리카 포럼(외교부),
한-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(지경부)

- 중복되는 양자간 협의체*는 통합 및 연계**하여 운영하되,
협의체 수가 적은 사하라 이남(가나, 탄자니아 등)은 신설을 검토

* 양자간 협력체(30개) : 아프리카 53개국 중 13개국만 설치·운영

** 알제리와 앙골라의 협의체 일부를 통합·운영

- 알제리 농업협력위 + 자원협력위 → 기존 알제리 경험 TF(통합)
- 앙골라 경제공동위 + 자원협력위 → 통합 운영

- 아프리카의 협력채널 조정 추이를 보아 중남미 지역 등
여타지역 중복협의체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

(2) 전략적 자원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

① (자원협력 확대) 에너지·희유금속 등 필수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원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

① 수은 등 국제금융기관의 자원개발금융을 확대*하고, 융자 외에도 매장량기초금융, 출자 등으로 지원수단 다변화

* 수출입은행 지원규모 : ('10) 3.1조원 → ('11) 3.6조원

무역보험공사 보증규모 : ('10) 2조원 → ('11) 2.5조원

- 자원개발펀드에 대한 투자위험 보증재원 확충* 추진

* '06년부터 매년 100억원씩, '06~'10년까지 총 500억원 지원

② 공기업 출자 증대*, 해외 유망 자원개발기업 M&A 등을 통한 자원공기업의 전문화·대형화로 자원개발투자 선도

* (석유공사) '12년까지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생산규모 30만 b/d 달성

(광물자원공사) '11년 자산규모 3조원, 세계 20위권 전문기업 목표

② (에너지 협력) 석유·가스의 경우 미주, 중동·아시아, 유럽·아프리카의 「3대 지역별 관리 등 맞춤형 협력전략」 수립

① 유망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, 에너지 협력외교지원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

② 특히, 석유공사는 유망자산 인수, 신규탐사 사업의 성공률 제고, Dana社 등 인수기업의 안정적 통합작업 추진

- 가스공사는 구매력을 활용하여 탐사와 가스전 매입 및 생산운영체제 참여 확대 추진

③ (광물 협력) 상대적으로 자주개발이 부진한 동·우라늄* 등의 확보를 위해 중남미·아프리카와의 협력기반** 등을 강화하고,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희토류, 리튬을 新전략광물로 지정

* 자주개발률('10년) : 동 6.2%, 우라늄 3.5%

** '11.1/4분기 칠레, 아르헨티나 등과 자원협력위 개최, 아프리카내 자원협력위 설치 확대

① 중국外 제3국 진출을 활성화하고, 국내 11개 희유금속
유망 부존지역에 대한 탐사(~'13) 실시

* 리튬삼각지대(칠레, 아르헨, 볼리비아), 중앙아 등

② 희유금속 비축기지를 완공하고 비축분 확대('11.하반기)

* 35일분 비축가능(비축규모 : '10년 8.1 → '11년 13.5일분)

③ 희유금속 주요 수입국인 일본과의 협력, APEC 등 다자
외교를 통해 수급불안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

④ (식량 협력)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곡물의 안정적 해외
조달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식량협력을 확대

① 곡물의 안정적인 해외조달기반 마련*을 위해 해외농지
확보에 필요한 장기·저리의 금융지원** 등을 지속 확대

* 2018년까지 주요 수입곡물의 10%(138만톤) 수준을 해외 생산·유통기지
확보를 통해 공급할 계획

** 농지관리기금 : ('10) 240→('11) 320억원(3년거치 7년 상환, 연리 2%)
- '09년부터 러시아·브라질 등 7개국에 진출한 18개 기업에 413억원을
지원, 14만톤 규모의 생산 및 유통시설 확보 중

② 「국가곡물조달시스템*」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곡물 수입·
공급망을 마련하고, 미국 등으로 편중된 곡물 수입선 다변화

* 국가곡물조달시스템 : 유통공사·실수요업체·종합상사·운송업체
등과 컨소시엄구성, 해외에 유통망 확보 후 수입 또는 제3국 수출

* 국별 수입비중('09) : 미국 84.7%, 남미 13.1, 유럽 2.1, 기타 0.1

③ 민간기업 단독의 해외 진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간
사전 협의 후 민간이 참여하는 민-관 합동진출 방식* 추진

* KOICA에서 추진중인 “필리핀 복합산업단지(MIC : Multi Industry
Cluster)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”와 연계하여 추진('10.4~'11.3)

(3) 기후변화 및 녹색분야 경제협력 강화

① (기후변화·녹색협력 강화)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녹색협력 강화 및 녹색분야 국제 논의 주도

① 물관리·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녹색 ODA* 및 녹색성장 경험** 전수 확대를 통해 우리 녹색성장 모델의 세계화 추진

- 특히,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과의 녹색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EDCF 지원 등 확대

* EDCF는 4년간('09~'12년) 지원규모를 당초 1.2조원에서 1.7조원으로 확대하고, ADB미래탄소 펀드 출자(2천만불)를 통해 국제기구의 CDM사업에 참여

** 녹색분야 KSP 사업(비중) : ('09) 4건(8%) → ('10) 6건(10%) → ('13) 20%

- 또한, 개도국의 물관리 시급성*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물관리 노하우를 활용한 '물 랜드마크 사업**' 본격화

* 현재 9억명 안전식수 사용 불가, 매년 150만명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

** 몽골·필리핀·아제르바이잔에 838억원 지원 계획(EDCF과 연계 추진)

② 기후변화·녹색성장 관련 글로벌 리더십을 적극 제고

- 기후변화협상에서 선진국-개도국간 가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, 녹색기후기금(Green Climate Fund)* 설계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정립

* 칸쿤 합의문('10.12월)에서 녹색기후기금 설립을 명시, 기금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선진국과 기금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는 개도국간 의견 대립

-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* 및 국제기구** 유치 노력 강화

*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('11.10월), 제18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('12), 제7차 세계물포럼('15) 유치 추진

**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(GGGI) 국제기구화 추진, 아시아산림협력기구 (AFoCO) 출범,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(IRENA) 아태지역센터 유치 추진

- OECD 녹색성장전략보고서('11.5월) 적극 참여와 OECD 각료이사회 선도 등을 통해 녹색성장 의제의 국제사회 확산 노력 지속

② (국제산림협력)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산림바이오매스 확보 등을 위해 정부간 산림협력 채널을 활성화*하고, 주요 국가에 대한 조림분야 투자진출을 확대

* 산림분야 국제협력사업비 : ('10) 76 → ('11) 153억원

① 기후변화협약 준수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 조림협력*을 강화

* 해외조림 '10년 21,000ha → '11년 25,000ha 실시

- 산림청과 KOICA는 인도네시아 롬복섬에 약 1만ha 규모의 탄소배출권 조림사업 및 산림훼손방지사업 추진('09~'13, 500만불)

② 특히,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부지매입이 가능한 중남미 지역을 산림협력의 교두보化 하여 우리기업의 「바이오 에너지 조림분야 투자진출 지원방안」을 마련

* 포스코는 우루과이에 1,000ha 규모의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UN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으로부터 탄소배출권사업 승인을 획득, 향후 5,500만불을 투자하여 2만ha 규모로 확대할 계획

(1) G20 등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공고화

① (G20 후속과제)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주요의제 등이 차질 없이 이행·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

- G20 Troika국가*로서 앞으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업무추진체계(조직·인력 등)를 조속 정비

* 前 의장국(한국), 現 의장국(프랑스), 次期 의장국(멕시코)로 구성

② (개발의제) G20 결과와 HLF-4* 연계, 아시아개발협력회의** 정례화, 연구기관·국제기구 등과 「G20 개발의제 세미나」 개최 등을 통해 개발이슈에 대한 지적 리더십을 적극 발휘

*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4차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(2011.11, 부산)

** '10년 한국에서 제1차 회의 개최, '11년 일본에서 제2차 회의 개최 예정

- G20 개발의제의 체계적인 후속 논의를 위해 KDI 연구 기능을 대폭 보강

③ (글로벌 금융안전망) 프랑스('11년 의장국)가 중점 추진할 예정인 국제통화시스템(IMS) 개편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* 제시 등 논의를 지속 주도

* 예시) IMF 대출제도와 지역안전망과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

- 자본이동 변동성 완화, 준비자산 다양화, 세계경제 거버넌스 검토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관계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우리측 대응방안을 마련

(2)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개발협력 강화

① (대외원조 확대) ODA 확대계획('15년 ODA/GNI 0.25%)에 따라 원조 규모를 대폭 증대('15년까지 연평균 25%내외)

○ 특히, 개도국 수요와 인지도가 높고 적은 재원으로도 개발 효과성이 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(KSP) 규모 배증

- * ① EDCF : ('10) 4,700억원 → ('11) 6,047억원 (전년대비 28.6% 증가)
- ② 무상원조 : ('10) 5,205억원 → ('11) 6,149억원 (전년대비 18.1% 증가)
- ③ KSP : ('10) 74.5억원 → ('11) 140억원 (전년대비 87.9% 증가)

② (ODA 선진화) 「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('10.10월)」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원조정책을 지속 추진

① (통합 지원전략 수립)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'12년까지 26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양허성 차관과 무상원조를 통합한 국가 지원전략*(CAS) 수립 ('11년 11개국)

- * 수원국 개발계획 및 우리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2~3개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양허성 차관·무상원조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 및 연계강화

② (사업 수행체계 개선) 사업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참여를 확대*하고 원조 사업 간 연계 강화

- * 상시 수요조사 시스템 구축 및 “EDCF-관계기관 협의체” 신설 추진

- 정책자문, 인프라 구축, 운영기법 전수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괄 지원체계(Total System)를 구축하여 원조 사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지속가능성 제고

- 예) ① 사회개발계획 수립 → 병원건설 → 초기 의약품 공급 및 의사·간호사 연수 → 지속 유지·관리(국내 병원 자매결연)
- ② 교통 인프라 개선계획 수립 → 철도 건설 → 운영기법 전수 및 유지·관리(KORAIL-현지 사업 실시기관 간 MOU 체결)

- 주요 수원국과의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, 정책협의를 시 관계 부처 참여 확대 추진

③ (선진 원조체제 도입) 국제사회 권고를 감안하여 최빈국 · 고채무빈국을 중심으로 비구속성 원조*를 단계적으로 확대

- * '15년까지 전체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75% 수준(EDCF 50%)으로, 최빈국 · 고채무빈국에 대해서는 90% 이상(EDCF 85%)으로 확대

- 원조자금에 대한 수원국 주인의식 및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원조* 등 선진 원조기법 도입

- * '11년중 베트남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EDCF, JICA(日), AFD(프) 공동 참여

-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민간투자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민-관 협력(PPP) 지원*을 확대

- * '11년중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“EDCF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” 마련

③ (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강화)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사회 개발 논의에도 적극 참여

① (국제기구 협력 확대) MDGs, 기후변화 · 식량안보 등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MDB 등을 통한 다자원조 적극 활용

- MDB 협조융자*, KSP 공동 컨설팅** 등 협력사업도 확대

- * MDB 협조융자 비율을 '12년까지 20% 수준으로 제고

- ** '11년중 MDB(WB, ADB, IDB, AfDB 등)와 지역별 1~2개 국가에 대해 실시

② (협력 네트워크 구축) 주요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정례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역내 개발협력을 강화*

- * '1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‘아시아 개발협력회의(ADCM)’를 정례화

- 수원국 내 원조 공여국 협의체에 참여하여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원조분업 확대

③ (국제개발논의 기여) 우리가 주도한 G20 개발의제를 비롯하여 국제사회 개발논의에 지속적인 지적 리더십을 발휘

- HLF-4('11.11월)를 통해 “원조”에서 “개발”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 방향 설정*에 기여

* 범정부차원의 HLF-4 기획단을 설립하여 OECD DAC 차원의 의제설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G20 개발의제와의 HLF-4 의제 간 연계 추진

- MDB, OECD, 혁신적 개발재원 등 개발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개발경험 등에 기반한 기여방안 모색

④ (개발 컨설팅 내실화) 한국식 개발모형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에 따라 개도국 대상 정책 자문사업(KSP)을 내실화하는 등 원조 사업 전반의 컨설팅 기능 확충

① KSP에 대한 개도국·국제기구 수요 급증 및 사업규모 대폭 확대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KSP 사업의 종합적/체계적 기획·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 운영 추진

② 「개발 컨설팅 분야에 대한 활성화 방안」을 마련하여 국내 기반이 취약한 개발 컨설팅 분야 산업여건*을 조성

* 입찰·수익성(단가) 등 개선을 통해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, 발전경험 콘텐츠 체계화·전문인력 양성·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 확대 등 추진

③ 원조 사업의 개발조사 비중 확대* 등을 통해 수원국의 경제·사회 발전을 위한 미래 개발사업 발굴 등을 지원

* 양허성차관사업 컨설팅비 지원(억원) : ('08) 24 → ('10) 57 → ('11) 60

(1) 대외활동기관 역량 강화 및 지역연구 강화

① (대외활동기관 역량 강화) 신흥지역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비롯하여 KOTRA, KOICA, EDCF 등 대외활동기관의 조직역량을 확충

① '11년중 조직, 인력을 우선 확충하고, 이후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「중장기 조직역량 강화방안」 마련('11년 상반기)

- 조직 확충과 더불어 대외조직간 중복기능 조정,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업무 운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

②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고위급 협의체에서의 현안 보고 및 점진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지원

- 대외경제정책 홍보강화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력체계 구축

② (지역연구·정보제공 강화) 세계 지역연구 기능을 확충하고 주요국 현안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외정책 수립을 뒷받침

① 신흥지역 연구 범위를 성장잠재력이 높고 자원외교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중남미,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

- 특히, 중국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하기 위해 협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, 국책연구기관의 중국 관련 현안 연구기능 강화*

* '중국정책 종합연구 5개년 계획('11~'15)'을 수립(경사연)

경사연 대중국 협동연구 지원규모 : ('10) 35억원 → ('11) 43억원

② 아울러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역연구 실태를 점검하고 「신흥경제권 지역연구 강화 방안」을 마련

- 연구기관뿐 아니라 IDB, ADB, AfDB 등 국제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의채널을 통한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검토

V. 향후 추진계획

① 「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」을 통해 수정·추가된 과제들은 「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(2010~2012)」(‘09.12월)에 따른 지속추진 과제와 통합하여 관리·점검

②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“추진전략” 진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·조정하여,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하에 개선방안 마련

(반기별) 진행상황 점검·조정

- 관계부처 협의하에 점검·평가하되, 업계·학계·연구소 등 민간 부문의 정성적 평가도 병행

(4분기) 반기별 점검 결과 및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2012년도 “추진전략” 마련 (‘12년말 전면 수정 실시)

- “추진전략” 마련을 자문하기 위해 업계·학계·연구소 주요 인사 등으로 구성된 “대외경제자문단” 운영

③ 추진전략에 포함된 “대응방향 / 추진전략^{*}”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‘11년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논의

* 예) 신흥시장 진출 지원전략, 지역별 경제협력방안 등